

## 규제자유특구 지원 내용

### □ 규제자유특구 지원 내용

-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지역특화특구와 달리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혁신 3종 세트(①규제 신속확인, ②실증특례, ③임시허가) 적용
  - ※ 특구 참여 사업자에 한하여 선택·확정된 특례만 적용
- (기존 규제) 메뉴판식 규제특례(201개) 적용
  - 지역특구법에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열거하고 지역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·확정하여 적용
  - 27개 지역전략산업 관련 35개 산업특례 반영
- (법령 미비 등)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
  - ① (규제 신속확인) 특구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 요청 할 수 있음
  - 규제적용 여부를 문의시 30일 이내 신속하게 회신 →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
  - ② (실증특례) 특구내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아래의 경우로 신기술의 시험·검증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

#### ◆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

-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
-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
-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
-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·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·기간 등을 한정하여 실증을 허용
- 유효기간 : 2년(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내 1회 연장), 안전성 입증시 소관법령정비 등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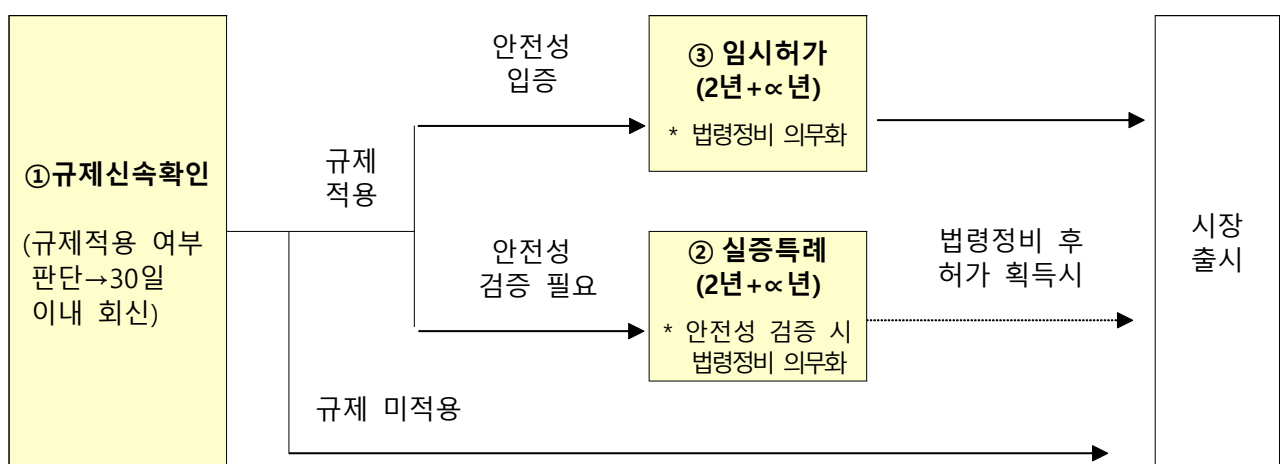
③ (임시허가) 특구내에서 혁신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등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우면,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

◆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

-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
-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

-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적으로 허가 부여 → 시장출시 가능
- 유효기간 : 2년(+2년), 임시허가 부여시 유효기간 동안 규제 소관부처에 법령정비 등 필요조치 의무화

< 규제혁신 3종 세트 개념도 >



## < 규제 샌드박스 적용(예) >

### ① 규제 신속확인

#### 【사례①】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



- ❖ (현황) 농지 外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 시 보험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
- ☞ 특구내 기업이 중기부에 문의하면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줌

### ② 실증을 위한 특례

#### 【사례②】무인선



- ❖ (현황) 現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하여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
- ☞ 현행 법령에도 불구하고, 규제자유특구 내 일정 해역을 정하여 안전성 검증 등 테스트베드 운영

#### 【사례③】자율주행 버스



- ❖ (현황)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현행법에 저촉
- ☞ 규제자유특구 내 일정 구역.기간을 한정하여 現 규제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

### ③ 임시허가

#### 【사례④】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



- ❖ (현황)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에 한계
- ☞ 임시허가(승인)를 통해 한시적 시장출시를 허용하여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도모

#### 【사례⑤】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



- ❖ (현황)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
- ☞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, 관련 법령 개정 추진